

역사교육, 깊이 있는 탐구·체험 중심으로

- 역사 부정·왜곡 등에 대응한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 발표(2.27.)
- 모든 학생에게 역사 수업과 연계한 맞춤형 탐구·체험 촘촘히 지원
- 역사 교사 역량 함양 체계 구축으로 현직·예비 교사 전문성 제고
- 중학교 「역사」 근현대사 확대, 고등학교 역사 교과 선택과목 신설 추진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월 27일(금)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최근 국내외로 확산된 역사 왜곡·부정 현상이 교실 수업 현장으로 유입되어, 교사의 수업 운영을 어렵게 하고 학생 간 소통과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깊이 있는 역사 탐구·체험을 경험하며 다원적 관점에서 토의·토론 등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방안은 ①역사 교실 수업환경 조성 지원, ②학생 맞춤형 역사 체험·탐구 활성화, ③역사 교사 역량 함양 체계 구축, ④교육과정 체계 조정·역사과 과목 신설, ⑤학교 역사교육 지원 기반 마련의 5대 과제로 추진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역사 교실 수업환경 조성 지원】

먼저 ‘민주시민 역사 수업원칙’을 마련하여, 헌법 가치와 사회적으로 합의된 역사적 사실의 범위에서 토의·토론, 연구 과제(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대한다. 이 원칙은 헌법적 가치 등을 바탕으로 교실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면서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역사 왜곡·부정 등에 대해 교육적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26.상) 수업원칙 마련 정책연구 → (26.하) 수업원칙 안내 → (27.) 사례집 개발·안내

또한, 학생의 탐구 역량을 키우는 역사 수업 활성화를 위해 ‘탐구 중심 역사 교육과정 운영 사례집’(‘26. 3종→’27. 9종)을 개발·보급한다. 더불어, 각종 기관·누리집(플랫폼) 등에 분산된 근현대 사료와 교육자료, 체험 자료 등을 수업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에게 묶음(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역사교육 자료 아카이브’를 구축(’27)할 예정이다.

〈‘역사교육 자료 디지털 아카이브’ 3·1운동 자료 제공 예시〉

기존 자료 제공 현황		→	역사교육 자료 아카이브
독립기념관	독립선언서, 주요 사적지 정보 등		▶ 3·1 운동 검색 결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1운동 특별 기획 영상, 사진 등		- (역사 자료) 사진 기록 등
평가지원포털(평가원)	서·논술형 평가지, 수행평가 과제 등		- (수업 자료) 수업·평가자료 - (체험 자료) 답사 체험처 등

※ (’26.상)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26.하~’27.) 시스템 개발·시범 적용 → (’28) 현장 활용

【2. 학생 맞춤형 역사 체험·탐구 활성화】

학생이 교과서 속 역사적 사건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역사 체험 기반을 확충한다. 관계 기관·단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역사 체험처를 발굴·연계하고, 전국·지역 단위 역사 캠프를 운영하며 학생·교원의 역사 체험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 학생·교원 역사 체험 캠프(’26. 30회), 학교 역사 체험활동 지원(’26. 200회 → ’27~ 300회 이상)

또한, 우리 역사 바로 알기 대회(국사편찬위원회), 전국 중·고교 역사 유시시(UCC) 경연대회(강원대)와 같은 전국 학생 역사대회를 통해 근현대사를 주제로 한 심층 탐구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이 주도하는 역사 심화 탐구 동아리(’26. 100개교) 운영도 지원하며, 학생 성과물은 역사교육 아카이브에 탑재해 공유·확산한다.

【3. 역사 교사 역량 함양 체계 구축】

한편, 교육부는 이번 방안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역사 선도교사단(100명 내외)을 운영한다. 선도교사단은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역량 있는 역사 교사로 구성될 예정이며, 이들은 향후 수업자료 개발과 교사 연수의 강사로 참여하며 학교 역사교육을 밀착 지원한다. 또한, 교사의 자율적인 역량 제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역사 교사 학습공동체를 공모로 선정(’26. 30개→’27. 40개 이상)해 지원한다.

그리고, 역사 교사가 역사 탐구 수업의 설계·운영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대학 연계 소단위 단기 집중과정(마이크로디그리형) 역사교육 연수, ▲권역별·지역별 연수, ▲역사 교사 자격연수, ▲원격연수 등을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교·사대 교육과정과도 연계해 예비 교사의 역량 향상도 지원한다.

【4. 교육과정 체계 조정·역사과 과목 신설 -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

현행 역사 교육과정이 근현대사를 충실히 학습하기에는 구성과 시수에 제약이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과정 체계 조정과 선택과목 신설을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에 요청할 계획이다.

현행 중학교 「역사」는 근현대사 비중(전근대 80% - 근현대 20%)이 적고, 중학교 3학년 2학기 고입 등 학사 일정으로 근현대사 교육에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근현대사 분량·시수를 확대하여 중학교 근현대사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이 접하는 역사 콘텐츠의 내용·근거 등을 탐구 과정을 통해 분석·비평하며 주체적 미디어 수용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선택과목 신설을 요청할 예정이다.

※ 【개정 절차 예시】 ('26.상) [교육부] 역사 교육과정 개정요청 → ('26~'27) [국교위] 역사 교육과정 개발·고시 → ('28~'29) [교육부] 교과서 개발·검정 → ('30) 새 교육과정 적용

【5. 학교 역사교육 지원 기반 마련】

아울러, 수업 지원부터 교육과정 개정에 이르기까지 역사교육 활성화 정책의 지속성을 높이고자, 학교 역사교육의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역사교육 주요 학회를 중심으로 역사 학계와 함께 민주시민 역사교육을 주제로 하는 기획 학술대회('26.~)를 지원해 관련 연구의 공론화를 확대한다. 학생·학부모·대국민 대상 홍보·행사를 진행하며 정책 공감대도 확산한다.

또한, 박물관·사적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역사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부-시도교육청-현장을 잇는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이번 방안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되도록 뒷받침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교과서 속 역사 지식이 탐구 수업과 체험 활동을 거치는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 평화·인권 등의 시민적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이끄는 역사교육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학교 역사교육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

담당 부서	학교정책관 동북아역사대응팀	책임자	팀장	김율리 (044-203-7040)
		담당자	교육연구관	우상수 (044-203-7042)
		담당자	교육연구사	정유석 (044-203-7041)